

본 브리핑

이 자료는 2021년 8월 31일(화)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본 브리핑 시작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21. 8.

기 획 재 정 부

순 서

I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1
II . 경제·재정운용 여건	2
III . 2021~2025년 재정운용 방향	6
IV .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10
V . 재정혁신 추진방향	14
[참 고]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26

I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 중기적 시계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으로 대내외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
- '04년 최초 수립('04~'08년 계획) 이후 '07년부터 국회에 제출
-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
-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단 및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 >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부처, '20.12월)
 - * 각 부처는 중기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21.1월말)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단 구성·운영 ('21.3월~)
-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부처·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21.4월~)
- 2021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21.5.27)
- 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예산편성·재정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21.6~8월)
- 분야별·지역별 예산협의회 개최 ('21.6~8월)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 ('21.8.4)
-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 ('21.8.25)
-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21.9.3)

II. 경제·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 여건

세계경제

□ (2021년) 지난해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그 속도는 국가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상황

- 미국·중국 등이 글로벌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가운데, 국가별 백신보급 속도 및 정책대응 여력 등이 회복속도를 좌우

		세계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브라질	남아공
* 성장률(% IMF '21.7) :	['20년]	△3.2	△3.5	△6.5	△4.7	2.3	△4.1	△7.0
	['21년 ^a]	6.0	7.0	4.6	2.8	8.1	5.3	4.0

- 다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경기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 (2022년 이후) 점진적인 경기 개선 흐름을 이어가면서 위기 전 성장경로를 점차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성도 잠재

- 선진국은 경제활동 정상화 등에 따른 성장 회복세가 지속되고,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구조적 대응 본격화 전망

- 신흥국도 백신보급 확대, 글로벌 경기·교역 회복 등으로 완만한 성장 회복 흐름을 이어갈 전망

- 다만, 코로나19 전개 양상,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변화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21	'22	'23	'24	'25	'26
세 계	6.0	4.9	3.5	3.4	3.3	3.3
- 선진국	5.6	4.4	1.8	1.6	1.5	1.5
- 신흥국	6.3	5.2	4.7	4.6	4.5	4.4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21~'22년은 7월전망, '23년 이후는 4월전망 기준)

국내경제

- (2021년) 글로벌 경제 및 반도체 업황 회복, 백신보급 확대 등을 바탕으로 경기·고용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글로벌 반도체매출 전망(% , WSTS, '21.8월) : ('20) 6.8 → ('21^e) 25.1 → ('22^e) 10.1

* 성장률(전기비, %) : ('21.1/4) 1.7<전년동기비 1.9> (2/4) 0.7<5.9>

* 취업자수(전년동기비, 만명) : ('21.1)△98.2 (2)△47.3 (3)31.4 (4)65.2 (5)61.9 (6)58.2 (7)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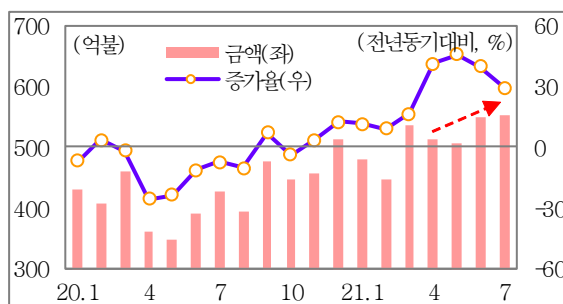
- 수출·투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경제 회복을 견인

* 수출(전년동기비, %) : ('21.1/4) 12.5 (4) 41.2 (5) 45.6 (6) 39.8 (7) 29.6

* 설비투자(전년동기비, %) : ('21.1/4) 11.9 (4) 16.4 (5) 10.9 (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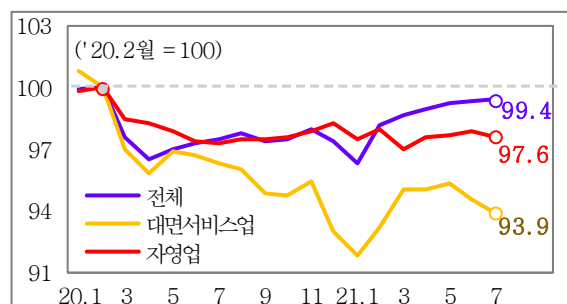
- 다만, 코로나19 4차 확산이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를 제약하고,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

통관수출 추이



* 자료: 관세청

취약계층 고용 추이



* 자료 : 통계청

- (2022년 이후) 글로벌 성장·교역 개선, 코로나19 영향 완화 등에 따른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나, 경제·사회 구조전환 대응 긴급

* 글로벌 교역(% , IMF '21.7월) : ('19) 0.9 → ('20)△8.3 → ('21^e) 9.7 → ('22^e) 7.0

- 수출·투자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경제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내수 회복세도 지속될 전망

- 다만,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전망 등 대내외 구조적 대전환 가속화 예상

* 디지털·저탄소 경제 시장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 본격화

(美) 5.9조불 규모 3대 재건정책<American ^①Rescue Plan, ^②Jobs Plan, ^③Families Plan> 추진 ('21.3)

(EU) 향후 4년간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에 955억유로 투자 추진 ('21.3)

** 초고령사회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 ≥ 20%

재정수입

- (국세수입)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21~'25년 국세수입은 '20~'24년 계획상 전망 보다 개선 예상
 -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세, 방역 상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율의 하방위험은 상존
 - 디지털·저탄소 사회로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추어 과세구조 개편 검토 필요
- (기금수입)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가입자 확대 및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입 증가 등으로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지속 증가할 전망
- (세외수입) 벌금·과태료 수입은 대체집행 증가 등으로 감소가 예상되나, 부담금 수입 증가 등으로 통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 포용적 경제회복, 경제사회 구조 전환 및 선도국가 도약,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을 위한 지출소요 확대 전망
- ❶ (경제 회복) 경제 정상궤도 진입과 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지출 지속 필요
 - 일자리 조기회복, 서비스 중심 내수촉진 등 경제회복 뒷받침
 -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기술 개발 및 쏠산업 혁신 등으로 경쟁력 확보 지원

② (양극화 대응) 부문별·지역별 격차 축소도 시급한 과제

- 소득·고용·의료·돌봄·주거·교육·문화 등 각 부문에서 포용기반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발전 확대

③ (경제사회 구조전환) 디지털 경제·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 구조로 선제적 전환 추진

- ¹⁾디지털·녹색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선도형 경제 구축
- ²⁾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³⁾체계적 혁신형 인재양성 및 직업훈련 서비스 확대로 인적자원 전환 뒷받침

④ (인구총격 대응)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추세에 적극 대응

- 생산가능인구 및 성장잠재력 감소에 대응하여 출산부터 취업까지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 인적자본 경쟁력 제고
-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방 광역경제권 형성 등을 통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

⑤ (국민안전) 안전을 보장받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나라 조성

- 감염병 등 생태 위기, 자연재해 및 신종 사회적 재난 등에서 국민안전 확보
- 스마트 강군 육성 등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남북 협력 확대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속 추진

'20~'24년 계획 대비 '21~'25년 부처요구

(단위 : 조원, %)

구분	'20	'21	'22	'23	'24	'25	증가율
▪ '20~'24년 계획(A)	512.3	555.8	589.1	615.7	640.3	-	5.7
▪ '21~'25년 부처요구(B)*	-	558.0	621.4	654.9	687.2	723.5	6.7
▪ 계획대비 추가요구(B-A)	-	-	32.3	39.2	46.9	-	-

* 중기사업계획서 부처요구 ('21.1월말)

Ⅲ. 2021~2025년 재정운용 방향

1 재정운용 기본방향

① 포용적 경제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 지속

- 내수·고용 회복 등 경제회복 공고화 및 위기과정에서 확대된 격차(新양극화)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확대
-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및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선도국가 기반 조성 적극 뒷받침
-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② 총량관리 강화 및 선제적 위험대응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지출구조조정, 협업예산 확대 등을 통한 지출 효율성 제고 및 조세특례 정비, 세외수입 확대 등 수입 기반 확충 노력 강화
- 경제회복 추세에 맞추어 지출증가속도를 조절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추진 등 재정위험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개선

③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의 효과성·민주성 제고

- 기후대응기금 및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 비효율적 기금 운용 정비 등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재정관리체계 혁신
-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재정운용 과정에 국민참여, 의견 수렴 확대 등 수요자 중심 재정운용 강화

재정수입

- 재정수입(총수입)은 '21~'25년 기간 중 연평균 4.7% 증가할 전망
- 국세수입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연평균 5.1% 증가할 전망
 - 특히 '22년 경제회복이 본격 반영됨에 따라 크게 증가한 후 '23년부터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나, 계획기간 중 지속 증가
 - 세외수입은 '21~'25년 기간 중 연평균 0.6% 수준 증가 전망
 - 기금수입은 '21~'25년 기간 중 연평균 4.7% 수준 증가 전망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2차추경					
▣ 재정수입	482.6	514.6	548.8	570.2	593.9	618.5	4.7*
○ 국세수입	282.7	314.3	338.6	352.9	367.7	383.1	5.1*
○ 세외수입	28.9	29.3	26.7	27.4	28.4	30.0	0.6*
○ 기금수입	171.0	171.0	183.5	189.9	197.7	205.4	4.7*

* '21년 2차 추경 대비 증가율 ('21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 : 재정수입 6.4%, 국세수입 7.9%)

- 조세부담률은 경제 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로 인해 '22년 상승한 이후 일정 수준 유지 전망

< 중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

(단위 : %)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 조세부담률	20.2	20.7	20.7	20.7	20.6
▣ 국민부담률	27.9	28.6	28.8	29.0	29.2

* 2차 추경 기준

** 국민부담률 상승은 일부 사회보험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확대 등에 기인

재정지출

- 재정지출(총지출)은 '21~'25년 기간 중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
 -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견인하고, 국정과제 완결을 위해 '22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 '23년 이후부터는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추어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하여 '25년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
 - 의무지출은 '21~'25년 기간 중 연평균 6.5% 증가
 - 복지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출 소요가 확대되나, 전달체계 개선, 복지제도 개편 등을 통해 사업 효율화 추진
 - 재량지출은 '21~'25년 기간 중 연평균 4.5% 증가
 - 위기 극복 과정에서 크게 증가한 한시적 재량지출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저성과 및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신규 투자 여력 확보
- * SOC 분야는 역세권 개발사업 등 부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에도 회수재원 활용, 민간 벤처투자 유도 등을 통해 재원조달 다변화

< 중기 재정지출 계획 >

(단위 : 조원, %)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2차추경					
▣ 재정지출	558.0	604.9	604.4	634.7	663.2	691.1	5.5
(증가율)	(8.9)	(18.1)	(8.3)	(5.0)	(4.5)	(4.2)	-
○ 의무지출	266.1	279.1	301.1	311.7	327.0	342.7	6.5
(비중)	(47.7)	(46.1)	(49.8)	(49.1)	(49.3)	(49.6)	-
○ 재량지출	291.9	325.8	303.3	323.0	336.2	348.4	4.5
(비중)	(52.3)	(53.9)	(50.2)	(50.9)	(50.7)	(50.4)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경제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과 지출증가속도 조절에 따라 재정지표가 개선되는 모습

○ (통합재정수지) '21년 $\Delta 4\%$ 대(2차 추경)에서 '22~'25년 $\Delta 2\%$ 중반~ $\Delta 3\%$ 수준으로 적자폭 축소

- '20~'24년 계획상 전망보다 적자폭 1.1%p 개선('22~'24년 평균)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년 $\Delta 6\%$ 대(2차 추경)에서 '22~'25년 $\Delta 4\%$ 대로 적자폭 축소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 (국가채무) '25년 국가채무비율은 50% 후반 수준 전망

- '20~'24년 계획상 전망보다 국가채무비율 2.2%p 축소('24년 기준)

<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

(단위 : 조원, %)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본예산	2차추경				
▣ 통합재정수지	$\Delta 75.4$	$\Delta 90.3$	$\Delta 55.6$	$\Delta 64.5$	$\Delta 69.4$	$\Delta 72.6$
(GDP대비, %)	($\Delta 3.7$)	($\Delta 4.4$)	($\Delta 2.6$)	($\Delta 2.9$)	($\Delta 3.0$)	($\Delta 3.0$)
※ 관리재정수지	$\Delta 112.5$	$\Delta 126.6$	$\Delta 94.7$	$\Delta 104.7$	$\Delta 108.4$	$\Delta 109.2$
(GDP대비, %)	($\Delta 5.6$)	($\Delta 6.2$)	($\Delta 4.4$)	($\Delta 4.7$)	($\Delta 4.7$)	($\Delta 4.6$)
▣ 국가채무	956.0	965.3	1,068.3	1,175.4	1,291.5	1,408.5
(GDP대비, %)	(47.3)	(47.3)	(50.2)	(53.1)	(56.1)	(58.8)

IV.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 기본 방향 >

- ◇ 포용적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위해 보건·복지·고용분야 투자 확대 추진
- ◇ 미래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뉴딜 2.0 등 경제구조 전환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산업·R&D·환경 분야 적극 지원
- ◇ 교육·농림분야 등은 중점지원 및 내실화 부문을 균형있게 고려

1 사회 분야

- 코로나19 위기 및 경제사회 구조 전환에 따른 新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고용·교육 등 사회안전망 투자 강화
 - (보건·복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상병수당 도입, 주거급여 보장성 확대 등 취약계층 소득·주거기반 확충
 - 친(親)가족 5대 패키지 지원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 강화,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제고
 - (일자리)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행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등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충
 - 신기술 직업훈련 확대, 비대면·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 지원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선제적 대응
 - (교육) 고교무상교육,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등 생애주기별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 및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
 -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위해 미래 유망분야 혁신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

- (문화·체육·관광) 문화·관광·스포츠 산업의 비대면·디지털 전환, 문화예술 콘텐츠 생태계 조성 및 관광산업 혁신 지원
 - 박물관 신설 등 하드웨어 위주의 지원에서 기존시설 디지털화, 실감형 콘텐츠 제작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투자 전환
- (환경) 기후대응기금 및 온실가스감축인자 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원활한 이행 뒷받침
 -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스마트 관리 등 투자를 확대하되,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유사·중복사업 정비 추진

2 경제 분야

- 한국판 뉴딜 2.0 추진,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선도국가 전환을 뒷받침하고 국가균형발전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산업·중기·에너지) K-반도체, BIG3 등 전략산업 육성,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및 스케일업 중점투자, 스마트화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재도약 지원
 - (SOC) 주요 기반시설 디지털화 추진,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및 스마트시티 보급·확산 지원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화 및 도시재생뉴딜·노후산단 개발 등을 통한 지역 주거·혁신성장 거점 조성
 - (농림·수산) 농어촌의 탄소중립 지원, 농·축·수산 분야 디지털화 및 청년 농·어업인 지원 등을 통해 성장동력 확보 및 활력 제고
 - 농업·수산 공익직불제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기존사업 지속 정비

- (R&D) 미래차 등 신산업, 소부장 자립화,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R&D 성과 가시화
- 국제 공동연구 및 다부처 연계 투자 등 협업 R&D 확대

3

행정 분야

- 스마트 강군 육성, 국가방역 기반체계 강화 등 국민안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 (국방)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무기체계 자립화, 군장병 교육·훈련 과학화 등 스마트 강군 육성 중점 지원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방분야에 도입·적용하고, 장병복지 향상 및 생산적 복무여건 조성으로 병영문화 개선
 - (외교·통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하고, 전략적 양자·다자외교 지원 및 재외국민 보호·안전 인프라 강화
 - ODA(공적개발원조)의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수원국가·분야별 전략적 자원배분 및 융합 ODA 활성화 등 추진
 - (일반·지방행정)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낙후·소외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 지원 강화
 - 행정·공공기관 노후장비 클라우드 전면 전환,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개발 등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가속화
 - (공공질서·안전) 감염병 등 신종·복합재난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예방·생활안전 투자 확대
 -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시설 확충 등 국가방역 기반체계 강화, 재해위험지역 정비, 산업재해 방ز시설 보강 등 추진

< 2021~2025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단위 : 조원, %)

구분	'21	'22	'23	'24	'25	'21~'25 연평균
총 지출	558.0 (8.9)	604.4 (8.3)	634.7 (5.0)	663.2 (4.5)	691.1 (4.2)	(5.5)
1. 보건·복지·고용	199.7 (10.6)	216.7 (8.5)	232.2 (7.1)	246.1 (6.0)	259.3 (5.3)	(6.7)
2. 교육	71.2 (△2.0)	83.2 (16.8)	84.8 (2.0)	87.4 (3.0)	90.0 (3.0)	(6.0)
3. 문화·체육·관광	8.5 (5.8)	8.8 (3.9)	9.1 (3.5)	9.4 (3.5)	9.8 (3.4)	(3.6)
4. 환경	10.6 (17.8)	11.9 (12.4)	12.9 (8.5)	13.7 (6.1)	14.5 (5.9)	(8.2)
5. R&D	27.4 (13.1)	29.8 (8.8)	32.3 (8.5)	34.0 (5.2)	35.4 (4.0)	(6.6)
6. 산업·중소기업 · 에너지	28.6 (20.8)	30.4 (6.0)	32.6 (7.5)	35.0 (7.2)	36.4 (4.1)	(6.2)
7. SOC	26.5 (14.1)	27.5 (3.8)	28.7 (4.4)	29.5 (2.5)	30.2 (2.4)	(3.3)
8. 농림·수산·식품	22.7 (5.3)	23.4 (3.4)	24.0 (2.3)	24.4 (2.0)	24.9 (1.8)	(2.4)
9. 국방	52.8 (5.4)	55.2 (4.5)	57.7 (4.4)	60.3 (4.6)	63.1 (4.5)	(4.5)
10. 외교·통일	5.7 (3.5)	6.0 (5.7)	6.2 (3.3)	6.4 (3.2)	6.6 (3.2)	(3.8)
11. 공공질서·안전	22.3 (7.0)	22.4 (0.3)	23.4 (4.4)	24.3 (4.1)	25.1 (3.1)	(3.0)
12. 일반·지방행정	84.7 (7.2)	96.8 (14.3)	100.4 (3.7)	103.0 (2.6)	105.8 (2.7)	(5.7)

V. 재정혁신 추진방향

1 수입기반 확충

◇ 재정의 역할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수입 기반을 확충하고
민간자본 등도 적극 활용

비과세·감면 정비 등 수입기반 확충

-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악의적
체납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능력 제고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등 역외세원 관리 강화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 방지,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검사권 확대 등을 통해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
- 예비타당성 평가 등 성과평가 제도를 통해 불요불급한 비과세
· 감면 항목을 정비하는 등 효율화 노력 지속
 -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이 미흡한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통해 종료 또는 재설계 검토
 - 조세지출예산서 관리체계 개선, 부처별 자율평가 환류기능
강화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

세외수입 확대

- 유휴 국유지 매각 확대, 배당수입 제고, 연체채권 관리 강화 등 세외수입 확대 노력을 통해 국고수입 증대 기반 마련
 - 민간의 활용기회 제고, 관리비용 절감, 재정수입 확보 등을 위해 관리실익이 낮은 보유 부적합 국유일반재산*의 매각 확대
 - * 행정목적에 활용 곤란한 ① 100㎡이하 토지, ② 사유건물 점유지, ③ 읍면지역 농지 등
 - 국유재산특례 일몰제 도입, 존치 평가를 통한 단계적 정비 등 국유재산특례의 사전·사후 관리 강화
 - 체납액 조기위탁 확대, 국가채권 관리사무 성과평가 실시 등 연체채권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출자기관의 안정적 경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만 유보*하는 등 중기 배당성향목표 설정 추진
 - * 유보 기준, 적정 배당성향 검토 등을 위해 배당정책 관련 연구용역 진행 중

민간자본 적극 활용

-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인프라 조기확충 및 산업화 시대 노후인프라 재구축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적극 발굴
 -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뿐만 아니라 산업·생활 인프라 및 노후시설 개량으로 대상시설을 다양화
 - 현행 수익형(BTO), 임대형(BTL), 혼합형(BTO+BTL) 민자방식 외에도 대상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방식 다변화
 - 수익성이 낮은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대사업 활성화*
 - * 부대사업 유형 확대, 적격성 조사 평가방식 개선 등

◇ 지출 구조조정 및 협업예산 확대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고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신규 지출소요를 충당

지출 구조조정

- 포용적 경제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략적 재원배분, 저성과·부진사업 정비 등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 저출산, 고령화, 지역인구 소멸, 4차 산업혁명 등 인구·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감안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
 -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한국판 뉴딜 2.0 등 핵심사업에 재투자
 - 재정사업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 보조금 평가 등을 통해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 과감한 구조조정 실시
 - 관행적 출연·보조사업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의무지출 도입시 재원조달 방안 구체화
 -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일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축소·조정

협업예산 활성화

- 협업예산제도 전면 확산 지원을 통해 유사·중복사업 정비, 부처 간 시너지 창출 등 지출효율화 노력 지속
 - 전문적 분업형·주기별 및 시스템별 협력형·수요자 맞춤형 등 유형별 협업과제 지속 발굴 및 기존 과제 내실화
 - 사업군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부처 합동 예산요구 및 기획·집행·평가체계 구축 등 실질적 협업체계 구축 추진
 - 창의적 협업과제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재정 전반으로 다부처 협업예산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민간의 창의 활용

- 민간의 아이디어와 자본을 도입하는 ‘국유지 민간참여개발’ 활성화를 통해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활용
 - 개발 가능 국유재산 범위 확대, 국가의 현물출자 허용 등 국유지 민간참여개발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
 -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에 국유지를 장기 대부하여 시설을 개발·운영토록 하는 시범사업 실시
- 민간투자사업에 민간의 창의를 접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의 참여유인 제고
 - 민자사업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을 위해 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연장, 규제완화 등 추진

* 소규모 복합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부담 완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 등

◇ 「편성 - 집행 - 평가」 등 재정운용의 전과정에서 혁신 노력을 강화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재원의 효율적 활용

- 칸막이식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회계·기금간 자원 조정 등을 통해 국가재원을 합리적으로 활용
- 아동학대 대응 등 여러 회계·기금에서 분산 운영 중인 재정사업의 재정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 자원 운용

-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및 온실가스인지 예산제도를 신설
 - (기후대응기금) 교통세 수입 중 일부, 배출권 유상할당수입 등을 중심으로 기금재원을 마련하고, 신규 수입원 확보도 중장기 검토
 - ①온실가스 감축지원, ②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③공정한 전환 지원, ④제도·기반조성 등 4대 분야에 중점 지원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재정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그 결과를 예산편성·운용에 반영
-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21.6월 공포)
-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대상 사업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여 '23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

중앙-지방재정제도 개선

-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추가 확충
 - 기능 이양 지원(2.3조원) 및 추가 재원 이양(1조원)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23년 기준, 4.2조원)
 - * 1단계 재정분권('18.10월)에서는 지방소비세율 10%p('19년 4%p, '20년 6%p) 인상
 - 지방소멸대응기금('22~'31, 매년 1조원) 신설하여 재정이 취약한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핵심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 개선
-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일반재정 간 연계 강화*, 광역 - 기초간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 개편 등 지자체간 재원 배분 개선 추진
 - * 교육청과 광역지자체가 평생·직업교육 등을 공동 추진하는 제도 도입 등

국가계약제도 혁신

-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조달 효율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코로나19 극복 등 당면한 정책과제 해결 지원
 - ①혁신·신산업 지원, ②중소기업 부담완화 및 권익보호, ③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의 3대 목표를 중심으로 계약제도 혁신
 - * (예) 혁신을 위한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등
 - 계약제도 혁신 TF('20.4~9월 운영)를 상시화한 「공공조달제도 개선위원회*」(위원장: 2차관)를 중심으로 체계적 제도개선 지속 추진
 - * 「조달사업법」에 따라 공공조달 관련 주요 정책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심의

혁신지향 공공조달

- 혁신조달 정책의 전 공공부문 정착을 통해 민간 기술혁신·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도 개선
 - 인큐베이팅*·스카우터** 등을 통해 수요 발굴부터 조달연계까지 지원하는 '수요기반 혁신조달' 추진
 - * 부처·지자체 등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문제를 발굴하여 과제로 구체화하고, solution탐색 지원 등 혁신조달연계 컨설팅 지원
 - ** 기술·창업전문가 등 전문가 그룹에서 혁신성은 있으나 정보부족 등으로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업제품을 집중 발굴하고, 혁신조달연계 컨설팅 지원
 -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주요정책 연계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인 혁신제품 풀(pool) 확대 추진
 - 혁신구매목표제*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실적 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참여 및 목표 달성 독려
 - * 물품구매액의 1.2%를 혁신구매에 활용,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평가에 반영

성과관리 내실화

- '22회계연도 재정사업에 대한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단위 성과목표관리 본격 추진
 - 프로그램 단위로 국민체감형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결과지표 위주로 성과지표*를 대폭 간소화
 - * 관리 대상 : (단위사업) 1,500개 수준 → (프로그램) 400개 수준
성과지표 수 : (단위사업) 4,000개 수준 → (프로그램) 1,000개 수준
 - ❶재정성과 DB 및 ❷대국민 성과포털 구축을 통해 재정사업 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

- 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화 등을 통한 성과관리와 예산 간 연계강화 추진
-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성과목표관리·성과평가 전반의 추진방향·계획 마련
 - * 재정당국이 5년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국가재정법 개정안 추진 중)
- 성과목표관리·성과평가 관련 기본방향 및 성과관리 대상과 운영방식 등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4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강화

◇ 고령화·미래 위기 등 중장기 재정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법제화)하고, 사회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 강구

재정준칙 도입

-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재정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개정안) 추진
 - *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20.10.5) →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제출('20.12.30)
-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에 대한 관리기준*을 도입하고, '25년 재정준칙 시행에 대비하여 선제적 총량관리 강화
 - * 재정준칙 관리기준(정부안): $(\text{국가채무비율}/60\%) \times (\text{통합재정수지}/\Delta 3\%) \leq 1.0$
- 대규모 재난, 심각한 경제위기 등 예외상황* 시 준칙 적용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뒷받침
 - * ①전시·사변, ②대규모 재난, ③코로나19 등에 준하는 경제위기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추진

- 「2060 장기재정전망」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연금·보험별 재정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적정 보험료율 산출 및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 유도방안 모색

국고채 안정적 관리

-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시장상황에 맞춰 국고채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국고채 수요기반 강화 노력도 지속 추진
 - 대·내외 경제상황, 시장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기별·연물별 국고채 발행물량 적정 배분
 - 국고채 전문딜러 인수여력을 보장하는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등을 통해 국채 수요기반을 확대
- 미래 차환위험 및 시장변동성에 대한 효율적 관리 노력 강화
 - 적정 수준의 조기상환 실시, 중·장기물 발행 등을 통해 국고채 만기구조를 분산함으로써 미래 차환리스크 축소
 -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토대로 필요시 적기 시장안정조치 시행

재정관리 인프라 강화

-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국가채무통계 보완 추진
 -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의 산출·표기 방식을 보완하여 국가채무 분류(금융성·적자성)의 투명성 제고
 - * 금융성 채무의 대응 자산 부족분과 적자성 채무의 대응자산 보유분 부기
 - 국가채무와 국가자산을 종합 고려하여, 국가채무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보완지표(순채무) 도입 검토
- 예산회계시스템(차세대 디브레인) 전면 재구축을 통해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 재정관리 기반 마련
 - 수입·지출·자금관리 업무의 절차 간소화·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 결산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결산정보의 적시 제공

5 재정운용의 투명성·민주성 강화

- ◇ 재정정보 공개 확대, 국민수요 기반 재정운용 등 재정운용의 투명성·민주성 강화 노력 확대

재정정보 공개 강화

- 「열린재정」의 재정정보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포함한 통합재정정보를 국제기준(GFS*)에 맞추어 공개하여 나라살림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 *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중앙, 지방, 비영리공공기관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통합재무제표를 산출

- 성과관리 제도, 성과 계획 및 평가결과 등 예산 사업별 성과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제공으로 수요자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성도 확대
 - (일반국민) 국고보조금, 출연금, 융자금 관련 수혜 정보를 열린 재정을 통해 대국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
 - (사업자) 정부 발주사업 관련 예산 정보, 공고 및 입찰 정보를 일괄 제공하여 정부 발주사업 참여 희망 업체의 편의성 제고
 - (연구자) 다양한 그래프 등 시각화 정보 공개, Open API 및 시계열·횡단면 분석 기능 제공 등을 통해 분석 및 연구지원 강화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 국민참여예산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사업 발굴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다각도로 확장 운영
 - 제안접수를 상시화하고, 제안 내용을 예산사업화하는 과정 (사업숙성)에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소통 강화
 - 부처와 사업발굴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여타 국민 제안 창구와 연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발굴 추진
- * 광화문 1번가(행안부), 한국판뉴딜 공모전(뉴딜추진단) 등과 제안접수 연계
- 예산편성 등에 관한 국민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여 재정정책 수립 등에 활용

국가결산체계 개편

- 예산통제·회계감사 위주의 국가결산서를 국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국가결산서로 개편
 - 복잡·전문적이고, 방대한 분량의 결산보고서를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핵심정보 위주로 간소화
 - 회계감사에 필요한 숫자 정보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의 다양한 성과정보(GDP 성장기여도 등)를 수록하는 방안 추진
 - 국가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인식·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자산 평가방식, 우발부채 공시사항 등 개선 검토

(1) 보건·복지·고용 분야

- 기초생보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보강
 -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주거급여 선정 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45→46%) 등 사각지대 해소
 -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 '21.10월 폐지, (의료) '22년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시 적용 제외
 - 기준중위소득 인상,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교육활동 지원비 인상 등 보장성 강화
 - 예술인, 특고,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전환 등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행
- 장애인, 위기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복지 포용성 강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아 미지원 사각지대 해소, 최중증 장애인 지원 강화 등 공백없는 장애인 돌봄체계 확립
 - 보호종료아동·위기청소년 자립, 학대 피해계층(아동·장애인·노인) 보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 가족 행복·육아 친화 사회기반 조성 및 노인 생활안정 강화
 - 0~1세 영아수당 도입, 아동수당 지원 범위 확대(7세→8세 미만), 육아휴직 활성화, 다자녀 지원 강화 등 육아 친화 기반 조성
 - * 영아수당 지급액: ('22년, 도입) 월 30만원 → ('25년) 월 50만원
 - 기초연금 지원 및 노인일자리 확대, 디지털 돌봄 확충 등 노인 소득기반 및 돌봄 지원 강화
- 국민건강을 위한 투자 확대 및 보건산업 육성 지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 재난적 의료비 및 상병수당 지원, 정신건강 지원 등 국민건강 투자 확대
 - 백신 허브화, 의과학자 양성, 의료기기·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보건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참 고】 일자리 분야 '21~'25년 재정투자 중점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속 이행으로 고용안전망 확충
 -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예술인·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소득정보 연계 강화로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저임금 신규가입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
 - 예술인·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원 확대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원으로 민간 고용시장 보완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 등 구직자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 장려금 지속 지원
- 저탄소·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여 직무 전환·전직지원 등 노동전환 지원 강화
 - 유급휴가훈련 등 재직 중 직무전환 교육 지원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신설·확대
 - 민간의 전직지원 서비스 확대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노동전환 지원 인프라 마련
- 디지털 분야 등 미래유망 분야 핵심인재 양성 확대
 - 구직자 및 재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확대
 - 폴리텍 등 직업훈련기관의 신기술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산재예방 지원 확대
 - 끼임·추락 방지시설 등 산재사망사고 예방시설 설치 지원
 - 영세 사업장의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밀착 컨설팅 강화

(2) 교육 분야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인재 양성
 - 대학 혁신을 통한 미래 유망분야 인재 양성 기반 마련 및 지역인재 양성 거점으로서 지자체-대학 협력 플랫폼 구축
 - 디지털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를 지정하여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고, 온라인을 통해 일반 국민에도 공개
- 초·중·등 교육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강화
 -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미래지향적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초학력 향상 노력 강화
 - 직업교육-선취업-후진학 성장경로 확립으로 고졸인재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투자 확대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생에 학습목적 특별 바우처를 지급하고, 고교무상교육(‘21년 소학년) 달성 등을 통해 차별 없는 출발선 보장
 - 대학생 등록금 및 학자금 상환대출의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연합기숙사 건립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
 - 노후 초·중·고교 건물을 그린스마트 스쿨(친환경+디지털)로 전환하고, 석면제거, 내진보강 등에 지속 투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 국민의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대학 수준의 학습이 가능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확대 추진
 - 저소득층·문해교육 대상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바우처 제공

[3] 문화·체육·관광 분야

-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문화콘텐츠 투자 확대
 - 메타버스 및 OTT 등 新유형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문화산업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 지속 지원
 -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신시장개척을 위한 사업 지속 추진
- 한류의 확장성·지속성 확보를 위해 연관산업 수출확대 및 전통문화·예술 등 콘텐츠 다변화 지원
 - 소비재·서비스 산업 등 연관산업 동반진출을 위한 해외 홍보관 설치 및 연계행사·협력마케팅 등 추진
 - 전통문화·예술·스포츠 등 우리문화 쏠 영역에서 다양한 한류 콘텐츠 발굴 및 해외진출 지원
- 소외·취약계층 및 지방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복토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대상 예술활동·생활체육 프로그램 등도 확대
 -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순회공연 확대로 지방의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문화취약지역 활력 촉진 및 문화도시 조성 지속 지원
-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등 혁신 강화
 - 스마트관광도시 확대, 관광빅데이터 구축 등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및 관광벤처기업 발굴 등 관광산업 활력 제고
 -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살아보기형 생활관광·야간관광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 지원 다변화
- 학습·일상생활과 체육활동의 병행 지원
 - 취약계층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한 풀뿌리 체육 활성화로 선수 육성체계 보완
 - 스포츠 과학화 및 국민체력인증 운영의 내실화, 스포츠윤리 센터 운영 등을 통한 체육계 학교 폭력 및 인권침해 방지

[4] R&D 분야

- 한국판뉴딜 및 소재부품장비 투자 확대 등 산업경쟁력 확충
 - 디지털 뉴딜 촉진을 위한 지능형메모리(PIM)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AI, 메타버스·자율형IoT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지원
 - 2050 탄소중립을 뒷받침 할 자원 순환경제, 디지털 기반 전력 수요관리,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S) 등 선도기술 투자
 - 소부장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및 미래선도품목 공급망 선점
- 미래첨 신산업 도전을 위한 우주·양자·6G분야 성장동력 발굴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초소형위성체계개발·한국형발사체 고도화 등 대형 R&D 신규 추진으로 우주 강국 도약
 - 양자컴퓨팅·센싱·통신 신규 투자 및 6G분야 인프라·장비·부품 주도권 선점을 위한 10대 과제* 추진

* Tbps 무선통신, THz RF 부품, 종단간 네트워크, 지능형 무선 액세스 기술개발 등
-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BIG3 분야 미래 주력 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전략적 투자 확대
 - 고출력·고효율 차세대 전략반도체 및 초고속·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로 반도체 분야 超격차 유지
 -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신약·의료기기 기술개발(혁신신약, 재활기기 등) 지원 확대로 혁신적 바이오헬스 시장 선도
 - 친환경차 성능 강화, 완전자율주행(레벨4)을 위한 지속 투자 및 “내연기관 산업(부품기업 등) → 친환경 전환” 지원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완료 및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추진
 - 미래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차세대 백신 기술, 원부자재 공정기술 국산화, 백신 특허지원 등 백신의 국가전략 기술화 추진
- 국정과제이행·혁신인재·국제협력 등 지원 강화로 혁신역량 확충
 - 국정과제 목표 달성, 수요 맞춤형·글로벌·지역 혁신인재 양성, 국제 연구플랫폼 진입 지원 확대 등 연구자·기업 혁신역량 강화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전략산업, 스마트화, 신산업 육성 등 소산업 경쟁력 강화
 - K-반도체, 미래차, 조선업 등 주요 전략산업 선도를 위해 자금, 인력, 설비투자, R&D 등 종합적 지원
 - 스마트 산단, 스마트공장 보급·고도화 등 인프라 지원 확대
-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 에너지 전환정책 안착을 위해 신재생 설비보조, 생산 및 시설 자금 장기저리 융자, 핵심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 미래먹거리인 수소산업 본격 육성을 위해, 수소 생산·유통·산업진흥·안전관리 등 소 단계에 걸쳐 지원을 강화
- 강한 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 안전망 구축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 보장 및 저신용 소상공인 등 긴급자금 공급
 -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 생산 기업을 육성하여 소상공인을 신성장 동력의 주체로 육성
 -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 지원 및 상권회복과 스마트상점·디지털 전통시장 등 온라인 판로 확대
-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 해외진출, 고용창출력 제고 지원
 - 예비 유니콘 기업, 비대면·그린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분야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지원 강화
 - 우수 창업기업 대상 해외진출 자금, 멘토링 등 지원 확대
- 코로나19로 변화한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견조한 수출흐름 지원
 - 마케팅·글로벌플랫폼 입점 등 전자상거래 지원 확대, 유망 중견기업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 R&D 등 지원

[6] SOC 분야

□ 대도시권 및 지방 광역경제권 교통망 지속 투자

-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출퇴근 편리성 증진 등을 위해 GTX A·B·C 등 수도권 광역철도 투자 본격화
- 광역 경제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 광역도로·철도 계속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4차 철도망 계획*에 신규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중 권역별 선도사업 선정**, 사전타당성조사 등 사업 절차 개시

* 지방 광역철도 신규사업 : (3차) 1개(0.5조원) → (4차) 11개(12.1조원)

**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총 24.6조원, '19.1월) 적기 완료 지원

* (도로) 제2 경춘국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울산 외곽순환도로, 국도 위험구간 등 7개
(철도) 남부내륙철도, 동해선 전철화, 석문산단인입철도, 대구산업선철도 등 8개

- 설계, 착공 등 전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을 집중 관리하여 차질 없는 준공 지원

* ['22년 추진목표] (도로: 7개) 설계 3, 착공·공사 4 (철도: 8개) 설계 6, 착공·공사 2

□ 드론·UAM 등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 및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등 SOC 첨단화

- 드론·UAM 등 첨단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 인프라를 조기 완공하고, 적용분야 확대를 위한 新사업 모델 발굴 지원 확대
- 철도신호시스템 전면 개량 착수 등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관리 강화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SPC선정(~'22년) 후 서비스 개발 등 투자 본격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 물류센터 스마트화 지원

[7] 농림·수산·식품 분야

-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촌 활력 제고
 - 농촌공간정비, 어촌뉴딜 300 등 “농어촌 활력증진 패키지” 지원을 통해 농어촌 정주·생활여건의 획기적 개선 추진
 - 농지·자금, 청년 정착금 등 종합 지원, 벤처캠퍼스 구축을 통해 청년 농업인 1만명 이상 및 청년 어업인 1천명 육성(~'25)
- 농·축산·수산업 쉼 과정(인프라-생산-유통-수출)에 걸친 디지털 전환 추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 동력 확보
 - 스마트 팜 혁신밸리,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등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어업 인프라 구축
 -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APC 구축, 농수산물 비대면 유통·수출 활성화 등 ICT 기반 유통체계 구축 지원
-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통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
 - 주요 식량작물 중 자급률이 낮아 식량안보에도 위협이 되는 밀·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유통·소비 단계별 지원 확대
 - 농업관측, 채소가격 안정제, 자조금 지원 등 사전적·자율적 수급기능 강화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 농업·수산 공익직불제 안착지원 및 재해예방 강화
 - 소규모 농어가 소득안정 기능 강화 및 환경·생태·먹거리 안정 등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수산 공익증진 직불제 안착
 -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 완화를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해예방 및 재해대책비·재해보험 등 피해지원 투자 확대

[8] 환경 분야

-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 확충 등 '2050 탄소중립' 이행 뒷받침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대상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적극적·획기적 저감
 - 무공해차 구매보조 물량 확대 및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통한 무공해차 획기적 확산 및 내연기관차 조속감축 유도
 - 추가 감축수단으로서 국립공원·습지·간척지·환경용지 등 탄소흡수원 지속 확대, 신규 흡수원 발굴·방법론 개발 추진
 -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 집중육성,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 및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한 녹색 정책금융 강화
 - 과감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 견인하고, 지역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하도록 체계적 지원 강화
- 폐기물 저감,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
 -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폐플라스틱 열분해 확대로 안정적 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
 - 폐기물 발생 감축, 재활용 극대화 생산구조 확립, 제품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경제성장과 자원사용의 탈동조화 추진
- 국민 생명·건강·행복과 직결되는 깨끗한 물·공기 확보 및 환경유해인자 지속 관리
 - 물관리 전 과정 스마트화 및 노후 상·하수관로 등 노후시설 개량, 미세먼지 핵심배출원 저감 가속화
 - 환경오염 피해지역 감시 강화, 친환경적 복원·회복 추진
- 기후위기 시대 홍수·폭염 대응 등 기후변화 관리 강화
 - 기후위기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량을 반영한 댐·하천 관리운영 체계 개선, 홍수취약지구 정비, 홍수예보 고도화 등 추진
 - 취약지역·취약계층 중심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및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 관리 강화

[9] 국방 분야

□ 첨단기술 기반 핵심전력 지속 증강

-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등 감시·지휘 전력 확보
- 핵·WMD 등 미사일방어, 전략목표 정밀 타격, 테러·사이버공격 방어 등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을 위한 첨단무기체계 지속 보강
- 미래 전장 환경 대비, 게임체인저급 무기기술개발 등 국방R&D 확대
- 방산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지원·클러스터 확대 및 방산기술 보호 강화

□ 작전·전투 중심으로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상비병력은 50만 명 수준 유지
- 전투부대는 간부증원 및 여군인력 확대를 통해 전투력을 보강하고, 비전투부대는 민간인력을 증원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

□ 4차 산업혁명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국방 구현

-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 등 3대 분야 혁신
- 첨단 ICT 기반의 고효율 선진 국방운영 실현, 초지능·초연결의 국방 인프라 조성, 첨단 기술 적용 무기체계 고도화

□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국방환경 조성

- 의식주를 포함한 군 생활 전반의 병영환경을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
- 장병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군 의료시스템 개편,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발전, 선제적·적극적 재난 대응 및 지원 등

[10] 외교·통일 분야

□ 높아진 국제위상 활용 '24~25년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수교기념 행사 확대 등 국익추구 외교 지원

- 출국 수요 정상화 대비 여권 제조·발급 및 여권 민원 홈페이지·시스템 개선 등 외교 행정서비스 강화
- 해외 체류 시 위기상황 대비 긴급대피, 무자력자 긴급지원 등 재외공관 활용 자국민 보호 영사조력 확대

□ 그린·디지털·보건, 융합 ODA 중심으로 전략적 ODA 투자를 확대

* '19년 대비 '30년까지 ODA 규모 2배 이상 확대 추진(G20 정상회의, '19년 6월)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그린·디지털·보건 ODA 강화, WFK 해외봉사단, 영프로페셔널 등 청년들의 개발협력 참여 확대
- 원조 효과가 큰 그린·디지털·보건 분야 및 수원국 만족도가 높은 인프라-역량 강화 유형 중심으로 융합 ODA 확대

* 융합 ODA 유형 : ① 인프라-역량 강화, ② 시스템-기술 지원, ③ 정책자문-실증

□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속 추진

- 남북간 대화 채널 복원 추진, 사회문화교류·민생협력 등을 시작으로 남북간 협력 확대, 적극적 '평화뉴딜' 견인

* 보건의료·재난재해·환경 등 비전통적 안보협력 분야를 발굴·추진하면서, 철도·도로 등 합의사항 이행 추진

- 평화·통일 관련 우리 사회 내 역량 결집, 지자체·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남북교류 참여 체계화로 '통일·평화 거버넌스' 구축

- DMZ 평화지대화, 평화·통일 지역 거점* 확대, 북한자료·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공개 확대 등으로 '대국민 통일행정서비스' 제공

* '25년까지 통일+센터 총 7개소 설치, ('18년) 인천 → ('23년) 호남·강원권 → ('24년) 충청·경기권 ('25년) 영남·제주권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 대상 신종범죄 초기대응-상담·조사-법률지원 등 인권친화적 전주기 사법지원체계 개편
 - (범죄대응) 보이스피싱, 몸캠, 스토킹 등 범죄 초기대응을 위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확대, 보이스피싱 탐지기 등 지원
 - (상담·조사)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여성·장애인 전용조사실 확대 및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 강화
 - (법률지원) 성폭력,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등 피해자 진술 조력 및 국선변호 확대
- 과밀수용 해소, 공기순환장치 설치 등 수용시설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개선
 - '23년까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수용시설 확충, 방역물품 비축 및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등 설치
- 수사권 확대에 따른 관련 수사인프라 및 경찰관 역량 강화 지원
 - (수사 인프라) 수사 물량 증가에 따라 문서 등 관련 자료 폭증에 대비해 수사자료 생산·보관·관리 관련 인프라 지원
 - (경찰관 교육) 수사권 확대, 신종범죄 증가, 피의자 인권보호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경찰관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예산 확대
- 재해예방 투자·국민 생활안전 투자 확대 및 재난대응역량 강화
 -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등 재해예방 투자 확대 및 IC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재난 대응역량 강화
 -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화재 등 국민 생활안전 중점 투자 및 소방·해경 등 재난 대응장비 고도화 지원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 지방소멸 대응·공동체 회복 등을 통한 지역사회 현안 해결
 - 지방소멸대응 양여금 신설(年 1조원)하여 지역 핵심 생활인프라(주거·통신 등) 구축 등 획기적 투자 지원
 - 지역거점형 소통협력공간 조성,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원 등 활력있는 지역사회 구현
- 서해 5도, 접경권,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특수상황 및 소외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포용적 지역발전 추진
 - 낙후된 미군 공여구역 및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투자 지원으로 국가 균형발전 추진
 - 접경·섬지역 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투자 확대
- 디지털 정부혁신 및 스마트 정부 구현 적극 추진
 -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이전·전환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이용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 육성 및 민간수요 뒷받침
 - 사회적 관심과 이슈에 대한 공공데이터 활용 및 국민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확산
- 민주화 기념사업 및 과거사 정리 등 책임 있는 국가 구현
 - 지속적인 과거사 진상규명활동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반한 종합적·체계적인 과거사 정리 토대 마련
 - 주요 과거사·민주화운동 관련 추모·기념사업을 지원하고 트라우마 치유 등 희생자·유족에 대한 피해지원 강화